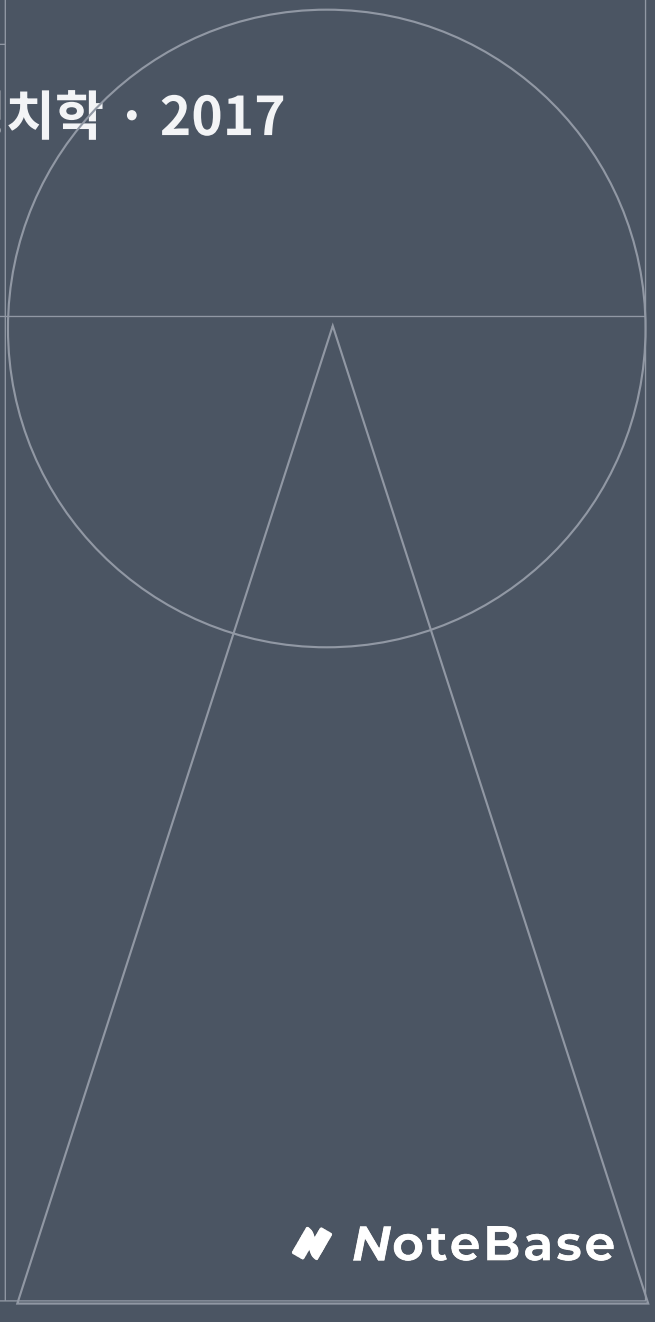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7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7

문 1. 1940년대 외교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포츠담회담
ㄴ. 얄타회담
ㄷ. 카이로회담
ㄹ. 트루먼독트린

① ㄷ → ㄴ → ㄱ → ㄹ
② ㄷ → ㄴ → ㄹ → ㄱ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ㄷ → ㄴ → 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한 주요 외교 사건들의 시기순 배열을 묻는 문항이다. 카이로회담과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은 모두 전쟁 종결 과정에서 열린 연합국 정상회담이고, 트루먼독트린은 전후 냉전이 시작되던 시점의 미국 대외정책 선언이라는 점에서 시대적 위치가 뚜렷이 구분된다.

올바른 순서

ㄷ. 카이로회담(1943년 11월, 미·영·중 정상이 모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한국의 독립 등을 논의)
→ ㄴ. 얄타회담(1945년 2월, 미·영·소 정상이 전후 처리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논의)
→ ㄱ. 포츠담회담(1945년 7~8월, 미·영·소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전후 처리 방침을 재확인)
→ ㄹ. 트루먼독트린(1947년,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봉쇄정책 선언, 냉전 개시를 알리는 사건)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ㄷ→ㄴ→ㄱ→ㄹ: 카이로(1943)→얄타(1945.2)→포츠담(1945.7~8)→트루먼독트린(1947) 순으로 시기순 배열이 정확하다.
② ㄷ→ㄴ→ㄹ→ㄱ: 카이로와 얄타 순서는 맞으나, 트루먼독트린(1947)을 포츠담회담(1945)보다 앞에 두어 순서가 틀렸다.
③ ㄷ→ㄹ→ㄴ→ㄱ: 카이로 다음에 트루먼독트린(1947)을 배치해 얄타(1945.2)·포츠담(1945.7~8)보다 앞선 것처럼 되어 틀렸다.
④ ㄹ→ㄷ→ㄴ→ㄱ: 가장 나중 사건인 트루먼독트린(1947)을 맨 앞에 두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오답 포인트

카이로·얄타·포츠담은 모두 종전 이전 또는 종전 시점의 연합국 정상회담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순서가 헷갈리기 쉬운데, 회담이 열린 해와 달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특히 트루먼독트린은 회담이 아니라 종전 이후 냉전기에 나온 정책 선언이므로, 세 회담보다 반드시 뒤에 와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트루먼독트린처럼 전후(냉전 개시) 사건인지, 아니면 종전 전후의 연합국 회담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세 회담은 카이로(전쟁 중, 1943)→얄타(종전 임박, 1945년 초)→포츠담(종전 직전, 1945년 여름) 순으로 전쟁 진행 단계에 따라 정렬하면 실수 없이 배열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카이로(1943, 한국 독립 언급)→얄타(1945.2, 소련 대일전 참전 합의)→포츠담(1945.7~8, 일본 무조건 항복 요구)→트루먼독트린(1947, 냉전 봉쇄정책)의 순서로 묶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2. 신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정부상태에서 권력(power)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라고 가정한다.

② 국제체제의 구조가 개별 국가의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③ 국가 간 상호 작용이 국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④ 국제체제 차원에서 능력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를 중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왈츠(Waltz)의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가 고전적 현실주의와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국가 행동의 동기를 '권력 그 자체'로 보는지 '생존/안보'로 보는지가 두 이론을 가르는 핵심 지점이며, 구조(체제 수준)와 단위(국가 수준)를 나누어 설명하는 신현실주의의 방법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고전적 현실주의(모겐소)=국가는 권력 그 자체(power as an end)를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신현실주의(왈츠)=국가는 무정부상태(anarchy)에서 생존(survival)과 안보를 궁극적 목표로 추구하며, 권력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신현실주의는 국가 행동의 원인을 개별 국가의 속성이 아니라 국제체제의 구조(무정부성+능력 분포)에서 찾는 구조적·체제 수준 이론이다. 구조는 단위(국가) 간 상호작용으로 쉽게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구조가 단위의 행동을 사회화·경쟁을 통해 비슷하게(모방적으로) 만든다고 본다. 체제의 극성(polarity)은 국제체제 내 능력 분포(양극/다극 등)로 정의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지 않은 설명(정답). 무정부상태에서 국가의 궁극적 목표를 '권력(power)' 그 자체로 가정하는 것은 모겐소류의 고전적 현실주의의 특징이다. 신현실주의(왈츠)는 국가의 궁극적 목표를 권력이 아니라 생존과 안보로 보고, 권력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권력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라는 서술은 신현실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② O → 옳은 설명. 왈츠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의 구조가 사회화(socialization)와 경쟁(competition) 메커니즘을 통해 개별 국가들의 행동을 서로 비슷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단위들의 기능적 유사화).
③ O → 옳은 설명. 신현실주의는 구조(체제 수준)가 국가 간 상호작용(단위 수준)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오히려 구조가 단위의 행동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④ O → 옳은 설명. 왈츠의 구조 정의에서 국제체제 내 능력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 즉 극성(polarity)은 체제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신현실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변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에서 가장 흔한 오답 경로는 '권력을 강조하니 현실주의는 다 권력을 궁극 목표로 본다'고 뭉뚱그려 판단하는 것이다. 신현실주의는 오히려 권력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안보 추구를 전제로 하고, 권력은 그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권력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또는 최종 목적)'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고전적 현실주의(모겐소)의 설명이 아닌지 의심한다. 신현실주의 관련 문항에서는 '생존/안보=목표, 권력=수단', '구조가 단위를 규정', '능력 분포=구조의 핵심 변수'라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신현실주의(왈츠): 목표=생존/안보(권력은 수단), 분석 수준=국제체제 구조(무정부성+능력 분포), 국가 행동=구조에 의한 사회화·유사화, 구조 변화=단위 상호작용으로는 어려움. 고전적 현실주의(모겐소)와 달리 '권력 자체가 목표'라는 표현이 나오면 신현실주의 설명으로는 틀렸다고 판단한다.

NoteBase

문 3. 억지정책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에게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

②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

③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 보유

④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를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억지(deterrence) 정책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억지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단념시키는 전략이며, 상대방의 공격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방어·격퇴 전략과는 구분된다.

핵심 개념

고전적 억지이론에서 억지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능력(capability):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실제로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신뢰성(credibility): 그 보복을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믿어야 한다. 셋째, 전달·소통(communication): 이러한 보복 의지와 능력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여 상대방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세 요소는 모두 '보복(retaliation)에 의한 위협'을 전제로 하며, 상대방의 공격 능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방어(defense) 또는 선제적 무력화(disarming first strike)의 개념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보복 능력까지 무력화해 버리면 오히려 상호 억지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논의된다.

선지별 해설

① 상대방에게 군사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 → O. 억지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②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 → O. 능력이 있어도 실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억지 효과가 없으므로 신뢰성은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③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군사력 보유 → X. 이는 상대방의 보복 능력 자체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어적·선제적 무력화 개념으로, 상대방의 공격 이후 보복하겠다는 위협에 의해 단념시키는 억지의 논리와 반대된다. 따라서 억지정책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④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를 상대방이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 → O.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소통하지 못하면 억지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④를 각각 능력·신뢰성·소통(전달)이라는 억지의 3요소로 정확히 짝짓지 못하고 모두 비슷한 군사력 관련 서술로 뭉뚱그려 읽으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특히 ③은 '군사력 보유'라는 표현이 ①과 비슷해 보이지만, ①은 보복(2차 공격) 능력이고 ③은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임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보복' '의지' '믿음' '전달·소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억지의 3요소(능력·신뢰성·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선제적으로 무력화' '먼저 제거' '공격을 막아낸다'처럼 상대방의 공격 능력 자체를 사전에 없애는 서술이 나오면 이는 억지가 아니라 방어 또는 선제 타격 개념이므로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억지의 3요소는 능력(보복할 수 있는 힘)·신뢰성(보복할 것이라는 믿음)·전달(그 의지를 상대에게 알리는 소통)이며, 상대의 공격력을 먼저 무력화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방어·선제타격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4.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연맹은 인권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② 영국은 상원의 파리평화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③ 평화애호국만이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④ 국제연맹 총회에서 절차문제는 그 회의에 대표된(represented)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설립 목적, 가입 요건, 미국 불참 경위, 총회 의결 방식 등 제도적 특징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국제연맹과 국제연합(UN)의 제도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참여 여부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함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핵심 개념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파리강화조약)에 따라 1920년 창설된 최초의 일반적 국제평화기구로, 주된 목표는 집단안전보장을 통한 전쟁 방지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었고 인권 보호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미국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음에도, 상원이 베르사유 조약(파리평화조약) 비준을 거부하면서 정작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 반면 영국은 국제연맹의 창설 회원국이자 상임이사국으로 처음부터 참여하였다. 국제연맹 규약은 가입 요건으로 '평화애호국'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았으며, '평화애호국'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은 이후 국제연합(UN) 헌장 제4조에서 채택한 원칙이다. 국제연맹 규약상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만장일치)를 요구했지만, 절차에 관한 문제 및 규약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회의에 대표된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선지별 해설

① 국제연맹은 인권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 X. 국제연맹의 핵심 목표는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전쟁 방지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었고, 인권 보호를 창설 목적의 중심에 둔 기구가 아니었다. 인권 보호가 본격적으로 국제기구의 주요 의제가 된 것은 국제연합(UN) 이후이다.
② 영국은 상원의 파리평화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 X. 상원의 조약 비준 거부로 국제연맹에 불참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영국은 국제연맹의 창설 회원국이자 상임이사국으로 계속 활동하였다.
③ 평화애호국만이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 X. '평화애호국'을 가입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국제연합(UN) 헌장이며, 국제연맹 규약에는 그러한 가입 조건이 없었다.
④ 국제연맹 총회에서 절차문제는 그 회의에 대표된(represented)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었다. → O. 국제연맹 규약상 실질적 사안은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를 요구했지만, 절차에 관한 문제는 예외적으로 그 회의에 출석·대표된 회원국의 과반수 표결로 결정할 수 있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국제연맹의 설립 목적을 국제연합의 인권 관련 의제와 혼동한 오답이고, ②는 조약 비준 거부로 불참한 나라를 미국에서 영국으로 바꿔치기한 오답이며, ③은 국제연합 헌장의 가입 요건을 국제연맹의 것으로 잘못 옮겨온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연맹 관련 문제에서는 '미국의 불참(상원의 비준 거부)'과 '영국의 창설 참여'를 짝으로 기억해 주체를 뒤바꾼 선지를 걸러낸다. 또한 국제연맹 규약과 국제연합 헌장의 제도(가입 요건, 의결 방식)를 서로 다른 문서로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연맹은 집단안전보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목표(인권 보호 아님), 미국은 상원의 비준 거부로 불참(영국은 창설 회원국), '평화애호국' 가입 요건은 국제연맹이 아닌 국제연합(UN) 헌장의 내용, 국제연맹 총회는 절차문제에 한해 대표된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 가능(원칙은 전원일치).

NoteBase

문 5. 1970년대 데탕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핵무기(INF)조약을 체결했다.

②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제한조약(SALT) I을 체결했다.

③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방지합의(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를 체결했다.

④ 소련은 헬싱키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에 합의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1970년대 미소 데탕트(긴장완화) 국면에서 실제로 체결·합의된 조약과 문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혼동하기 쉬운 1980년대 후반의 군축 조약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므로 1970년대 데탕트와 무관한 사건 하나를 골라내야 한다.

핵심 개념

1970년대 데탕트의 대표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I은 1972년 닉슨과 브레즈네프가 체결한 미소 간 전략무기 수량 제한 합의다. 핵전쟁방지합의는 1973년 미소가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결한 합의다. 헬싱키최종의정서는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채택된 문서로 소련을 포함한 유럽 각국이 국경 불가침과 인권 존중 등에 합의한 것이다. 반면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은 1987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체결한 조약으로, 데탕트기가 아니라 1980년대 신냉전을 거친 이후 냉전 말기 군축 국면에서 이루어진 합의다.

선지별 해설

①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핵무기(INF)조약을 체결했다 → X, INF조약은 1987년에 체결되어 1970년대 데탕트의 성과가 아니다.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제한조약(SALT) I을 체결했다 → O, 1972년 체결로 1970년대 데탕트의 대표적 성과다.
③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방지합의를 체결했다 → O, 1973년 체결된 미소 간 합의로 1970년대 데탕트에 해당한다.
④ 소련은 헬싱키최종의정서에 합의했다 → O, 1975년 체결로 1970년대 데탕트의 산물이다.

오답 포인트

INF조약을 SALT나 START 계열의 다른 미소 군축 조약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착각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INF조약은 명칭에 '핵'과 '조약'이 들어 있어 SALT나 핵전쟁방지합의와 같은 시기로 혼동하기 쉬우나, 체결 시점이 1987년으로 1970년대 데탕트 이후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소 군축·긴장완화 관련 조약이 나오면 먼저 체결 연도를 기준으로 시기를 나눈다. 1972년 SALT I, 1973년 핵전쟁방지합의, 1975년 헬싱키최종의정서는 1970년대 데탕트에 속하고, 1987년 INF조약과 1991년 START I은 그 이후 냉전 말기의 군축에 속한다는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970년대 데탕트 3대 사건은 SALT I(1972), 핵전쟁방지합의(1973), 헬싱키최종의정서(1975)로 정리하고, INF조약(1987)은 별도로 1980년대 후반 군축 조약으로 구분해 외워 둔다.

NoteBase

문 6. 존 러기(John Ruggie)는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질서의 안착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내재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②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③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경제시설을 전면 국유화한다.

④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리에 따라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존 러기(John Ruggie)가 제시한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개념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내재된 자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와 GATT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가 순수한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내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과 결합된 형태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핵심 개념

내재된 자유주의는 대외적으로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자유무역이 초래하는 실업·소득 불안정 등 부작용으로부터 국내 경제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복지 정책과 경제 개입을 병행하는 절충적 체제를 말한다. 즉 자유주의(자유무역)와 국가 개입(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embedded(내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순수 자유방임(고전적 자유주의)과도 다르고, 자원과 산업을 전면 통제하는 국가통제경제와도 다른 절충적 성격을 지닌다.

선지별 해설

①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 X: 내재된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순수 자유방임이 아니라,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반대되는 설명이다.

②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 O: 내재된 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그로 인한 국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적·제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는 것이다.

③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경제시설을 전면 국유화한다. → X: 전면 국유화는 자유무역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통제경제의 특징으로, 자유무역과 정부 개입을 절충하는 내재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④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리에 따라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 X: 금본위제 복귀나 통화주의는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신자유주의·통화주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으로, 러기가 말한 내재된 자유주의와는 무관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내재된 자유주의를 '자유방임'이나 '전면적 자유화'로 단순화해 이해하면 ①을 정답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재된 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내적 개입(복지·안정화 정책)의 결합이라는 절충적 성격에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내재된 자유주의' 또는 'embedded liberalism'이 등장하면, 선지에서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개입한다'는 식의 절충적 표현을 찾는다. 순수 자유방임형 선지와 전면 국유화형 선지는 모두 오답으로 소거한다.

암기 포인트

내재된 자유주의(존 러기) = 자유무역(대외) + 선택적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안정화(대내)의 절충. 자유방임도 아니고 전면 통제경제도 아닌 중간 지점의 체제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7.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원칙의 하나인 고립주의(isolatio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먼로독트린은 유럽에 대해서 고립주의를, 미주 대륙에 대해서는 패권적 개입주의를 의미했다.

② 미국은 중립법을 만들어 외국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 하였다.

③ 고립주의는 부패한 유럽과 달리 미국이 순결한 '미국의 혼'을 가진다는 예외주의와 긴밀히 연관된다.

④ 19세기 동안 미국은 고립주의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채택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미국 외교정책 전통의 하나인 고립주의(isolationism)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고립주의는 '외부 세계와 일체 관계를 끊는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유럽 대륙의 세력균형 정치와 동맹에는 불개입하되 미주 대륙(서반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점적·패권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중적 원칙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19세기 미국의 실제 행보(영토 팽창, 먼로독트린에 근거한 서반구 개입, 19세기 말 대외 팽창)를 고립주의라는 명분과 대조해 옳지 않은 진술을 골라내야 한다.

핵심 개념

고립주의=유럽의 세력다툼·동맹체제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원칙(조지 워싱턴의 고별사에서 유래한 '얽히는 동맹 배제'). 먼로독트린(1823)=유럽 열강의 미주 대륙 재식민화·간섭을 배격하는 동시에, 미국이 서반구에 대해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유럽에 대한 불간섭과 미주에 대한 패권적 개입이 결합된 원칙이다. 예외주의(exceptionalism)=유럽은 부패하고 타락한 구세계인 반면 미국은 새로운 질서를 세운 순결한 국가라는 자기 인식으로, 고립주의의 도덕적 기반이 되었다. 중립법(Neutrality Acts, 1930년대)=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대한 반성으로 외국의 분쟁에 무기 판매·차관 제공 등으로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먼로독트린은 유럽 열강에 대해서는 상호 불간섭(고립주의)을 요구하면서도, 미주 대륙에 대해서는 미국이 독점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주장하는 패권적 개입주의의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 이는 고립주의의 이중적 성격을 정확히 설명한 진술이다.
② O: 1930년대 중립법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국의 전쟁·분쟁에 무기 수출이나 차관 제공 등을 통해 연루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의 전형적 사례로 옳은 설명이다.
③ O: 고립주의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부패한 구대륙 유럽과 대비되는 순결하고 예외적인 국가라는 미국 예외주의 관념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다. 고립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정확히 설명한 진술이다.
④ X: 19세기 미국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고립주의였지만, 실제로는 서반구에 대한 팽창과 개입(먼로독트린을 통한 미주 대륙 개입, 영토 팽창, 19세기 말 대외 진출)을 지속했다. 즉 고립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한 것과 별개로 자유주의적·패권적 개입 정책을 함께 수립·시행했으므로, '개입주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고립주의의 실제 내용(유럽 불간섭+미주 개입, 중립법, 예외주의)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진술이어서 소거된다. ④는 '고립주의를 채택했다'는 전반부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뒤에 이어지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후반부가 실제 역사(먼로독트린에 근거한 서반구 개입, 팽창정책)와 어긋난다. 전반부의 익숙함에 이끌려 문장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립주의 관련 문제는 '유럽에는 불간섭, 미주에는 개입'이라는 이중구조를 기준으로 각 선지를 판단한다. 특정 정책(중립법·먼로독트린 등)이 언급되면 그 정책이 실제로 고립주의의 어느 측면(유럽 불간섭인지 미주 개입인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개입 정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처럼 전면 부정하는 문장은 먼로독트린의 개입적 성격과 충돌하지 않는지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고립주의=유럽 불간섭+미주 패권적 개입(먼로독트린)의 결합, 예외주의=부패한 유럽 vs 순결한 미국이라는 자기인식, 중립법(1930년대)=제1차 세계대전 참전 반성에서 나온 외국 분쟁 불연루 정책으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8. 1973년에 발표된 6·23선언(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②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③ 한국은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재천명했다.

④ 한국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1973년 6월 23일 발표된 6·23선언(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6·23선언은 냉전기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문호개방과 실용외교 노선을 천명한 선언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이념·체제가 다른 국가에도 문호 개방,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반대 철회, 기존 우방과의 유대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 선언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선언은 아니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핵심 개념

6·23선언의 핵심은 '북한과의 공존을 사실상 인정하되,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지는 않는다'는 이중적 성격에 있다. 선언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북한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밝혔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실용적 조치였을 뿐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승인·인정하겠다는 선언과는 구별된다. 동시에 선언은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이념과 체제가 다른 모든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우방국과의 유대관계는 그대로 공고히 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선지별 해설

① 6·23선언은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옳은 설명이다.
② 6·23선언은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태도를 밝혔을 뿐,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서술은 선언의 실제 내용과 다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 '북한과의 유엔 동시가입 및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국가 승인과는 별개)'.
③ 6·23선언은 기존 우방들과의 유대관계를 계속하여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옳은 설명이다.
④ 6·23선언은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함께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라는 표현을 '국가로 승인·인정'과 같은 의미로 혼동하는 것이다. 국제기구 활동을 허용하는 것과 국가로 정식 승인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조치이며, 6·23선언은 후자를 선언한 적이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6·23선언 관련 문제가 다시 나오면, 선언에 담긴 개별 조치(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문호개방, 우방과의 유대 강화)를 하나씩 대조하면서 그중 어느 것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인정한다'는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6·23선언 = 문호개방(호혜평등) +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 기존 우방 유대 강화. 단, 북한을 국가로 승인·인정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9.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은?

브레튼우즈체제에서 미국 달러의 총액이 통화로 보유한 미국의 금 가치를 넘어서면 달러의 금태환성에 대한 믿음은 약화된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치르고 국내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자, 프랑스는 보유한 미국 달러로 금을 매수했다.

① 트리핀 딜레마

② 먼델-플레밍 모델

③ 가격-정화-흐름(price-specie-flow) 메커니즘

④ 헥셔-오린 정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브레튼우즈체제(달러-금 태환 고정환율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서술한 지문을 읽고, 그 현상을 지칭하는 이론적 개념의 명칭을 맞히는 문제이다. 지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유통 중인 달러 총액이 미국이 보유한 금의 가치를 넘어서면 달러의 금태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둘째, 1960년대 베트남전쟁과 복지정책 확대로 미국의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커지자 프랑스가 보유 달러로 실제 금을 매수했다는 점인데, 이는 신뢰 약화가 실제 금태환 요구(금 인출 사태)로 이어진 구체적 사례이다.

핵심 정리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이 세계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달러)을 공급하려면 국제수지 적자를 계속 내야 하는데, 그 적자가 누적되어 유통 달러량이 자국 금 보유량을 초과하면 그 통화의 가치·태환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근본적 모순을 가리킨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금 1온스=35달러'로 달러와 금을 고정 태환하는 구조였으므로, 달러 공급 확대(유동성 제공)와 태환 신뢰 유지(건전성 유지)가 서로 상충하는 이 딜레마가 체제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문의 재정·경상수지 적자 확대 → 신뢰 약화 → 프랑스의 금태환 요구라는 흐름이 바로 이 딜레마가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트리핀 딜레마: 옳다. 기축통화 공급 확대와 태환 신뢰 유지 사이의 모순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지문의 '유통 달러 총액이 금 가치를 초과하면 신뢰가 약화된다'는 서술 및 재정·경상수지 적자 심화로 프랑스가 금을 매수한 사례와 정확히 일치한다.
② 먼델-플레밍 모델: 틀리다. 이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고정환율제 각각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모델로, 브레튼우즈체제의 신뢰 위기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③ 가격-정화-흐름(price-specie-flow) 메커니즘: 틀리다. 이는 흄(Hume)이 제시한 고전적 금본위제 자동조정 메커니즘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금(정화)의 국가 간 이동과 그에 따른 물가 변동을 통해 저절로 균형을 되찾는 과정을 설명한다. 지문은 자동조정이 아니라 신뢰 붕괴 문제를 다루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④ 헥셔-오린 정리: 틀리다. 이는 국가 간 요소부존도(자본·노동의 상대적 풍부함) 차이가 비교우위와 무역 패턴을 결정한다는 국제무역이론으로, 통화·태환 신뢰 문제와는 무관하다.

오답 포인트

②·③·④는 모두 국제경제학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이론이라는 이유만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 지문이 다루는 주제가 '무역 패턴'이나 '정책 유효성'이 아니라 '기축통화의 태환 신뢰 위기'라는 점을 먼저 확정하면 소거된다. 특히 ③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은 '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트리핀 딜레마와 혼동하기 쉬운데, 이는 금본위제하 무역수지 자동조정 과정이지 태환 신뢰 붕괴와는 별개 개념임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기축통화 발행국의 국제수지 적자', '유통 통화량이 보유 금(준비자산)을 초과', '태환 신뢰 약화'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곧바로 트리핀 딜레마로 연결한다. 반대로 '고정환율/변동환율에서의 재정·통화정책 효과'가 나오면 먼델-플레밍 모델, '무역수지 불균형이 금 이동과 물가 변동으로 자동 조정'되면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 '요소부존도 차이에 따른 무역 패턴'이면 헥셔-오린 정리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트리핀 딜레마 = 기축통화국의 유동성 공급(적자 지속) vs 태환 신뢰 유지(건전성)의 모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0. 민주평화론을 구성하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국가는 다른 민주국가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②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는 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보다 더 크다.

③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는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보다 더 크다.

④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률은 독재국가가 승리하는 확률보다 더 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이 축적해 온 경험적(계량적) 연구 결과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민주평화론의 핵심 주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이원적 명제(dyadic peace)로 '민주국가끼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국가적 명제(monadic peace)로 '민주국가는 비민주국가에 비해 덜 호전적이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 연구들은 전자는 강하게 뒷받침하지만 후자는 약하게만 뒷받침하며, 오히려 전쟁 개시(선제 공격)나 승률에서는 민주국가가 유리한 조건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핵심 개념

이원적 민주평화(dyadic peace)=민주국가 대 민주국가 관계에서만 전쟁이 극히 드물다는 명제, 통계적으로 가장 확고하게 지지된다. 단일국가적 명제(monadic peace)=민주국가가 전반적으로 덜 호전적이라는 명제, 지지 근거가 약하다. 승전 편향(selection effect)=민주국가 지도자는 여론과 책임성 때문에 승산이 높을 때만 전쟁을 개시·수행하려 하므로 전쟁 승률이 높고, 전쟁 개시 여부에서도 신중하기보다 오히려 유리한 상대(비민주국가)를 골라 개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Reiter & Stam 등)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민주국가 간에는 분쟁이 생겨도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고 협상·중재 등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핵심이자 가장 확고한 경험적 발견이다.
② O — 민주국가-비민주국가 조합의 전쟁 빈도는 민주국가-민주국가 조합의 전쟁 빈도보다 훨씬 크다. 이는 단일국가적 명제가 약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민주국가도 비민주국가와는 여전히 자주 싸운다).
③ X — 옳지 않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독재국가가 민주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가 민주국가가 독재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보다 크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민주국가는 승산이 높다고 판단될 때 비민주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개시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으며, 두 유형 사이에 뚜렷한 비대칭이 확인되지 않거나 민주국가의 개시 빈도가 낮지 않다는 결과가 다수이다. 즉 '독재국가의 개시 빈도가 더 크다'는 단정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O — 민주국가는 지도자의 정치적 책임성(여론·선거)으로 인해 승산이 높은 전쟁만 선택적으로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실제 전쟁 승률이 독재국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잘 알려진 경험적 결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④는 모두 민주평화론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 될 수 없다. ③은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오답으로,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가 더 크다'는 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주체를 바꾸어 놓은 전형적인 함정이다. 전쟁 개시 주체에 관한 연구는 이런 단순한 비대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주평화론 문제에서는 '민주국가 간 전쟁 부재(이원적 명제)'와 '민주국가의 전반적 호전성 여부(단일국가적 명제)'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 선지가 개시 빈도·승률·해결 방식 중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고, 개시 빈도에 관한 주장은 '독재국가가 민주국가를 더 많이 공격한다'는 식의 단순 비대칭 서술이 나오면 우선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민주국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이원적 명제, 최강 지지) / 민주국가도 비민주국가와는 자주 싸운다(단일국가적 명제, 약한 지지) / 민주국가는 전쟁 승률이 높다(선택적 개입·책임성) / 개시 빈도의 독재-민주 비대칭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NoteBase

문 11. 유럽의 전통외교제도와 비교되는 20세기 신외교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외교(open diplomacy)가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되었다.

② 외교에 대한 공적 심사가 강화되었다.

③ 정례적 · 상설적 다자외교가 쇠퇴하였다.

④ 외교관의 활동에 대한 본국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20세기 신외교(new diplomacy)가 유럽의 전통외교(구외교, old diplomacy)와 비교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묻는다. 신외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밀조약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공개성·민주적 통제·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흐름과 반대되는 서술을 찾아야 한다.

핵심 개념

전통외교는 소수의 직업외교관이 양자 간 비밀협상으로 국가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20세기 신외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밀외교에 대한 반성과 미국 윌슨 대통령의 '14개조'를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공개외교의 원칙 천명, 의회·여론에 의한 외교 심사 강화, 국제연맹·국제기구를 통한 정례적·상설적 다자외교의 확대, 정상외교·회의외교의 증가, 그리고 통신·교통 발달에 따른 본국 정부의 재외공관 통제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개외교(open diplomacy)가 국제연맹에 의해 채택되었다 → 옳다. 국제연맹 규약은 비밀조약을 배제하고 모든 조약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외교 원칙을 제도화하였다.
② 외교에 대한 공적 심사가 강화되었다 → 옳다. 신외교 시대에는 의회의 비준 동의, 여론과 언론의 감시 등 외교정책에 대한 공적·민주적 통제와 심사가 전통외교 시기보다 강화되었다.
③ 정례적·상설적 다자외교가 쇠퇴하였다 → 틀린 표현. 신외교 시대에는 국제연맹과 같은 상설 국제기구의 등장, 정기적인 국제회의와 다자간 협상의 확대로 정례적·상설적 다자외교가 오히려 발전·강화되었다. '쇠퇴하였다' → '발전(강화)하였다'로 고쳐야 옳은 서술이 된다.
④ 외교관의 활동에 대한 본국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 옳다. 통신·교통 기술의 발달로 본국 정부가 재외공관 및 외교관의 활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지시·감독할 수 있게 되어 외교관의 재량은 줄고 본국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오답 포인트

①②④는 모두 신외교의 실제 전개 방향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라 정답에서 제외된다. 다자외교의 흐름을 전통외교식 양자 비밀외교와 혼동해 '쇠퇴'라는 표현을 그대로 옳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이므로 먼저 발문을 재확인한 뒤, 신외교의 4대 특징(공개성 확대, 공적 심사 강화, 다자외교 확대, 본국 통제 강화)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 서술(강화를 쇠퇴로, 확대를 축소로 표현)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20세기 신외교=공개성↑ · 공적(의회·여론) 심사↑ · 상설·정례 다자외교↑(국제연맹 등) · 본국의 외교관 통제↑로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12. UN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UN과 지역적 기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② 지역적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는 UN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진전을 장려한다.

④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구는 예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아래에서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UN 헌장 제8장(지역적 약정, 제52조~제54조)이 규정한 UN과 지역적 기구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지역적 기구의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에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필요한 원칙과 그 예외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정답을 가른다.

용어 풀이

지역적 약정·지역적 기구(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중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조직된 지역 단위의 협정·기구(예: 미주기구, 아프리카연합 등).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 병력 사용 등을 포함해 상대국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취하는 제재·개입 조치.

핵심 구분

원칙: 지역적 기구의 강제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제53조 제1항 본문).
예외: 헌장 발효 당시의 적국(구 추축국)에 대한 조치 등은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조치에 '예외 없이' 안보리 허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즉 '허가 필요'가 원칙이나 '예외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제52조 제1항의 취지로,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지역적 약정·기구는 UN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② O — 제52조 제2항으로, 지역적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역적 기구를 구성한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보리에 회부하기 전에 그 지역적 약정·기구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O — 제52조 제3항으로, 안보리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보리의 회부에 의하여 지역적 약정·기구를 통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전을 장려한다.
④ X — 제53조 제1항은 지역적 기구의 강제조치에 안보리의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적국에 대한 조치 등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예외 없이 안보리의 허가 아래에서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예외 없이' → '원칙적으로(적국 조치 등 예외를 제외하고)'.

오답 포인트

④가 담고 있는 '안보리 허가가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는 옳은 원칙이라 얼핏 맞는 문장처럼 보인다. 함정은 '예외 없이'라는 단정 표현이다. 제53조에 적국 관련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예외가 없다고 못박은 순간 틀린 진술이 된다. 이렇게 원칙은 맞지만 '예외 없이·반드시·항상' 같은 절대 표현을 덧붙여 오답으로 만드는 방식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적 기구 관련 선지에서 '강제조치'와 '평화적 해결'을 먼저 구분한다. 평화적 해결(제52조)은 지역적 기구가 자율적으로 우선 시도하지만, 강제조치(제53조)는 안보리 허가가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 없이·모든 경우·반드시' 같은 절대적 한정어가 붙은 선지는 예외 규정 유무를 떠올려 우선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UN 헌장 제8장 핵심: 제52조=지역적 약정은 UN 목적·원칙에 부합, 지역 분쟁은 안보리 회부 전 우선 지역적 해결, 안보리는 이를 장려. 제53조=지역적 기구의 강제조치는 안보리 허가가 원칙(단 적국 조치 등 예외 있음). 제54조=지역적 기구의 활동은 안보리에 상시 통보. '평화적 해결=지역 우선 / 강제조치=안보리 허가(예외 존재)'로 묶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13.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차 세계대전 중 진행된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를 공식화하였다.

②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되었다.

③ 미국은 일본의 주권 회복과 동시에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사용을 추구하였다.

④ 소련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성격과 그 결과로 형성된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특히 이 조약을 계기로 만들어진 동아시아 안보체제가 유럽의 나토(NATO)식 다자안보체제와 달리 미국을 축으로 하고 개별 동맹국을 바퀴살로 삼는 양자 동맹의 연결망,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hub-and-spoke, 부챗살 체제)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1년 9월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태평양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켰다. 같은 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일본 내 미군 기지 주둔이 계속 허용되었다. 동아시아 안보체제=유럽과 달리 미국이 각각의 동맹국(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과 개별적으로 양자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구축되었으며, 나토와 같은 하나의 다자적 집단안보기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옳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 즉 일본의 항복 이후 배상·영토·주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조약이다.
② 옳지 않다. 실제로 이 조약 이후 동아시아에는 나토와 같은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한국·필리핀 등과 각각 별도의 양자 동맹조약을 맺는 부챗살(hub-and-spoke) 구조, 즉 양자안보체제가 형성되었다. '다자안보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서술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표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동맹의 연결망(부챗살 구조)이 구축되었다'이다.
③ 옳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같은 날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주권 회복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내 미군 기지 사용권을 계속 확보하고자 하였다.
④ 옳다.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조약 내용(특히 영토 조항 등)에 반발하여 최종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조약의 '내용'과 그 조약이 만들어낸 '체제의 성격'을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조약 자체가 여러 나라(48개국)와 체결된 다자조약이라는 사실과, 그 결과로 형성된 안보질서가 다자적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자조약이라고 해서 곧바로 다자안보체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축으로 한 개별 양자동맹들의 묶음, 즉 양자안보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아시아'와 '다자안보체제'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면 일단 의심한다. 냉전기 유럽(나토)과 동아시아(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안보 구조를 대비해서 묻는 것이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므로, 유럽=다자, 동아시아=양자(부챗살) 라는 대비 구도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1)=태평양전쟁 전후 처리+일본 주권 회복, 같은 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일본 내 미군 기지 사용 근거. 동아시아 냉전 안보질서=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연결망(부챗살, hub-and-spoke) — 다자안보체제 아님(유럽 나토와 대비). 소련=회의 참석, 서명은 거부.

NoteBase

문 14.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TFT(tit-for-tat) 전략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TFT 전략은 최초 게임에서 먼저 내가 비협력을 선택하고 이후부터는 바로 직전 게임에서의 상대 선택을 그대로 따르는 전략이다.
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무한정 지속될 때 TFT 전략은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ㄷ.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쌍방 모두 TFT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 때 일방이 의도와 달리 한 번 비협력을 선택하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TFT(tit-for-tat, 맞대응) 전략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원리와 그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TFT 전략의 작동 규칙(첫 수는 협력, 이후는 상대의 직전 선택을 그대로 따라감), 게임이 무한 반복될 때 협력이 촉진되는 이유, 그리고 실수로 인한 비협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상호 보복(에코 효과)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개념

TFT 전략은 로버트 액설로드(Robert Axelrod)의 반복 죄수의 딜레마 컴퓨터 토너먼트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규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최초 게임에서는 반드시 협력을 선택한다. 둘째, 두 번째 게임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직전 게임에서 선택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상대가 협력했으면 나도 협력, 상대가 비협력했으면 나도 비협력).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무한정 반복되면(미래의 그림자가 충분히 길면), 당장의 배신으로 얻는 이익보다 장기적 협력으로 얻는 이익이 커지므로 상호 협력이 안정적인 균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TFT는 상대의 선택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보복적' 성격 때문에, 의사소통 오류나 실수로 어느 한쪽이 의도치 않게 비협력을 한 번 선택하면 상대도 비협력으로 응수하고 다시 그 비협력이 되돌아오는 식으로 비협력이 계속 주고받아지는 현상(에코 효과)이 나타나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X — TFT 전략은 최초 게임에서 비협력이 아니라 협력을 먼저 선택하는 전략이다. 이후 게임부터 직전 상대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맞지만, 첫 수를 비협력으로 시작한다는 서술은 TFT 전략의 정의와 어긋난다.
ㄴ. O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무한정 반복될 때는 당장의 배신 이익보다 미래의 협력 이익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TFT 전략을 쌍방이 채택하면 상호 협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ㄷ. O — 쌍방이 TFT 전략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실수로 한 번 비협력을 선택하면, 상대는 그 비협력에 맞대응하여 비협력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되돌아와 비협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코 효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에서 가장 흔히 틀리는 지점은 ㄱ이다. 'TFT는 처음에 협력으로 시작한다'는 규칙을 '비협력으로 시작한다'로 잘못 기억하거나, 문두를 급하게 읽고 뒷부분의 '직전 상대 선택을 따른다'는 서술만 보고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첫 수는 반드시 협력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또한 ㄷ을 'TFT가 협력을 유도하는 좋은 전략이니 실수가 있어도 문제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해 틀렸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TFT는 상대의 선택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 한 번이 보복의 연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TFT 관련 문제가 나오면 먼저 '첫 수=협력'이라는 규칙부터 확인한다. 그 다음 무한 반복 여부에 따라 협력 유지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무한 반복이면 협력 촉진), 마지막으로 실수·오해로 인한 일회성 비협력이 발생했을 때 TFT의 보복적 성격 때문에 협력이 오히려 깨질 수 있다는 점(에코 효과)을 순서대로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TFT=첫 수 협력+이후 직전 상대 선택 그대로 따라 하기. 무한 반복→협력 가능성 상승. 실수로 인한 비협력 1회→보복의 연쇄(에코 효과)로 협력 가능성 하락.

NoteBase

문 15. 브레튼우즈체제 해체 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존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했다.

②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이 올랐다.

③ 원유와 같은 주요 상품이 미국 달러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④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이 모색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브레튼우즈체제가 언제, 어떻게 해체되었는지를 정확한 사건·시점과 연결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브레튼우즈체제 창설(1944년)과 해체(1971년 닉슨쇼크 이후) 관련 사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 금 1온스당 35달러로 금태환을 보장하는 고정환율체제였다. 1971년 미국의 금 보유량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를 배경으로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을 일방적으로 중지(닉슨쇼크)하면서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었고, 이후 1973년 주요국 통화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금태환 중지 이후 달러의 금에 대한 고정가치가 사라지면서 달러로 표시되는 금의 시장가격은 상승했다.

선지별 해설

① 금태환을 중지한 것은 존슨 대통령이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다(1971년 닉슨쇼크). 존슨 대통령 재임 시기(1963~1969년)에는 브레튼우즈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금태환이 중지되면서 달러의 금에 대한 고정된 교환비율(온스당 35달러)이 무너졌고, 이후 금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며 달러 표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브레튼우즈체제 해체와 직접 연결되는 옳은 설명이다.
③ 원유 등 주요 상품이 달러로 거래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는 1970년대 중반 산유국과의 별도 협정을 통해 자리 잡은 현상으로, 브레튼우즈체제의 해체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다.
④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브레튼우즈체제의 창설과 함께 설립이 모색된 기구이다. 체제의 해체 시기가 아니라 출범 시기와 관련된 설명이므로 틀렸다.

오답 포인트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 관련 사실(IBRD·IMF 설립)과 '해체' 관련 사실(금태환 중지, 변동환율제 이행)을 뒤섞어 고르기 쉽다. 또한 금태환을 중지한 대통령의 이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①을 정답으로 오인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등장하는 사건이 브레튼우즈체제의 '출범'과 관련된 것인지 '해체'와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시점으로 분류한다.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 닉슨(해체)과 존슨·트루먼(체제 유지 시기)을 구분하고, 페트로달러처럼 얼핏 관련 있어 보이지만 체제 해체 이후 별도로 형성된 현상은 오답 후보로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 IMF·IBRD 설립 모색. 1971년 닉슨쇼크: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 중지, 이후 금의 달러 표시 가격 상승. 1973년: 주요국 변동환율제로 이행.

NoteBase

문 16.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 중 밝힌 정책 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의 철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② 미국이 소련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③ 핵보유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④ 미국은 베트남전쟁과 같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발표한 이른바 닉슨 독트린(괌 독트린)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독트린은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 핵심은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방위 공약 축소와 아시아 국가들의 자주국방 요구에 있다. 이 문항은 실제 발표 내용과 관련 없는 서술(미소 관계에 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이를 가려내도록 요구한다.

핵심 개념

닉슨 독트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은 조약상의 약속을 지키되 베트남전쟁과 같은 방식의 군사개입은 피한다. 둘째, 아시아 동맹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 셋째, 그 외의 안보 문제(내란·재래식 침략 등)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일차적 책임을 지고 대응해야 하며 미국은 군사·경제 지원에 그친다. 이는 냉전기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직접적 군사개입에서 동맹국의 자주국방 지원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 주는 선언이다. 닉슨 독트린은 발표 이듬해인 1970년 닉슨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를 통해 전 세계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공식화되었다. 한편 이 시기 미국의 대소련 정책은 데탕트(긴장완화) 흐름 속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협상 등으로 이어졌지만, 이는 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아시아 정책 구상과는 별개의 흐름이며 괌 독트린의 구성 요소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이 베트남에서의 개입을 축소하고 철수를 검토하는 방향을 시사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② X - 미소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괌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아시아 정책 구상에 속하지 않는다.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아시아 동맹국의 자주국방 요구와 미국의 군사개입 축소이지, 소련과의 정상외교 일정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O - 닉슨 독트린은 핵보유국에 의한 위협에 대해서만 미국이 핵우산으로 대응하고, 그 밖의 안보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독트린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O - 닉슨 독트린은 베트남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 장기전에 휘말리는 상황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에서 오답으로 유도되기 쉬운 지점은 ③번이다. "핵보유국의 위협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가 스스로 해결"이라는 표현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져 옳지 않은 진술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닉슨 독트린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옮긴 정확한 서술이다. 반대로 ②번은 얼핏 냉전기 미국 외교의 일반적 흐름(데탕트, 미소 정상외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 옳은 진술로 오인하기 쉽지만, 괌에서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와는 무관한 서술이므로 옳지 않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닉슨 독트린 관련 문항에서는 선지가 '베트남전쟁 개입 축소', '핵 위협 시 핵우산 제공', '비핵 위협 시 자주국방 요구', '베트남식 전쟁 재발 방지'의 네 가지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이 네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서술(예: 소련과의 정상회담, 유럽 정책, 경제원조 확대 등 독트린 발표 내용과 무관한 진술)이 섞여 있으면 그것이 옳지 않은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닉슨 독트린(괌 독트린, 1969.7.25.) 핵심 3요소: (1) 조약상 공약은 유지하되 베트남식 군사개입 재발 방지, (2) 핵보유국의 위협 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3) 그 외 안보 문제는 아시아 국가의 자주적 해결 기대. 미소 정상회담·데탕트 관련 내용은 괌 독트린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NoteBase

문 17. 이탈리아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마치니는 공화국 건설을 위하여 '청년 이탈리아'를 조직했다.
ㄴ. 1859년 솔페리노에서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군에게 승리했다.
ㄷ.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 전쟁 중 이탈리아가 프로이센에 가담했고, 종전 후 베네치아를 얻었다.
ㄹ.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 전쟁 중 이탈리아군이 로마로 진군했고 로마가 이탈리아에 통합되었다.

①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탈리아 통일(리소르지멘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마치니의 공화주의 운동에서 시작해 1859년 대프랑스 동맹전쟁,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이 모두 이탈리아 영토 통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이탈리아 통일은 사르디니아 왕국(피에몬테)을 중심으로 한 대외전쟁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완성되었다. 1859년 프랑스-사르디니아 연합군의 대오스트리아 전쟁(솔페리노 전투 포함)으로 롬바르디아를 획득했고,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 이탈리아가 프로이센 편에 가담하여 베네치아를 얻었으며,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으로 프랑스군이 로마에서 철수하자 이탈리아군이 로마로 진군해 로마를 병합함으로써 통일이 완성되었다. 이와 별도로 마치니는 청년이탈리아를 조직해 공화주의 노선의 통일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마치니는 공화국 건설을 위하여 청년이탈리아를 조직했다 → O. 마치니는 군주정이 아닌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청년이탈리아를 결성하여 이탈리아 민족주의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
ㄴ. 1859년 솔페리노에서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군에게 승리했다 → O. 1859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프랑스-사르디니아 연합군이 솔페리노 전투를 포함한 일련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롬바르디아를 사르디니아에 병합시켰다.
ㄷ.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 전쟁 중 이탈리아가 프로이센에 가담했고, 종전 후 베네치아를 얻었다 → O.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이탈리아는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어 오스트리아에 맞섰고, 전쟁 종결 후 베네치아를 이탈리아 영토로 편입했다.
ㄹ.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 전쟁 중 이탈리아군이 로마로 진군했고 로마가 이탈리아에 통합되었다 → O.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자 로마를 지키던 프랑스 주둔군이 철수했고, 그 틈을 타 이탈리아군이 로마로 진군하여 로마를 이탈리아에 병합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했다.
네 진술 모두 옳으므로 ㄱ, ㄴ, ㄷ, ㄹ이 전부 포함된 선지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①(ㄴ, ㄷ)·②(ㄱ, ㄴ, ㄷ)·③(ㄱ, ㄷ, ㄹ)은 모두 옳은 진술 중 일부를 누락한 선지다. ㄱ을 단순히 사상가 개인의 일화로 여겨 통일 과정과 무관하다고 보거나, ㄴ의 솔페리노 전투를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66년)과 혼동하거나, ㄹ의 로마 병합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과 무관한 사건으로 오인하면 일부 항목을 빠뜨리게 된다. 연도와 교전국 조합(1859년 대오스트리아, 1866년 대오스트리아·프로이센 편, 1870년 대프랑스·프로이센 전쟁 계기)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탈리아 통일 문제는 연도-교전국-결과(획득 영토)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확인한다. 1859년=대오스트리아 전쟁(솔페리노)→롬바르디아, 1866년=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이탈리아는 프로이센 편)→베네치아, 1870년=프랑스-프로이센 전쟁(프랑스군 철수)→로마 병합, 이 세 시점을 축으로 삼으면 어떤 조합형 문제가 나와도 각 진술의 참·거짓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마치니-청년이탈리아-공화주의, 1859년 솔페리노-대오스트리아-롬바르디아 획득, 1866년 대오스트리아 전쟁-프로이센 편-베네치아 획득,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로마 진군-로마 병합(통일 완성) 순서로 묶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8. 한국의 양자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전쟁 중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② 박정희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기 위하여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③ 닉슨 행정부는 인권외교를 내세웠고, 유신을 추진하던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했다.

④ 노태우 행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를 이루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국 현대 외교사에서 각 행정부(아이젠하워, 박정희, 닉슨, 노태우)가 추진한 대외정책의 성격과 그로 인한 한미관계의 갈등·협력 국면을 정확히 짝짓는 문제이다. 특히 인권외교라는 특정 정책 기조를 어느 미국 행정부와 연결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핵심 정리

아이젠하워 행정부=한국전쟁 정전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함께 한국군 전력 증강 지원을 약속함. 박정희 행정부=베트남전쟁 파병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 함. 닉슨 행정부=닉슨독트린에 따라 데탕트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함(안보공백 우려). 인권외교는 닉슨이 아니라 카터 행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카터 행정부가 유신체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함. 노태우 행정부=냉전 종식기 북방정책을 추진해 소련·중국과 수교함.

선지별 해설

① O - 한국전쟁 휴전을 전후해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군사원조) 지원을 약속했다.

② O - 박정희 행정부는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유보와 군사·경제 지원을 확보하려 했다.

③ X - 인권외교를 대외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유신체제 박정희 행정부와 갈등한 것은 닉슨 행정부가 아니라 카터 행정부이다. 닉슨 행정부는 닉슨독트린에 따른 데탕트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로 박정희 행정부와 마찰을 빚었을 뿐, 인권외교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 인권외교를 내세운 행정부는 닉슨이 아니라 카터로 바꾸어야 옳은 설명이 된다.

④ O - 노태우 행정부는 냉전 해체기에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루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닉슨 행정부와 카터 행정부의 대한(對韓) 정책 기조를 혼동하기 쉽다. 닉슨은 데탕트·주한미군 감축(닉슨독트린)으로 갈등을 빚었고, 인권외교로 유신정권을 압박한 것은 뒤이은 카터 행정부라는 시간순서와 정책 주체를 구분하지 못하면 ③을 옳은 설명으로 오인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미국 행정부 이름과 정책 기조(데탕트/닉슨독트린, 인권외교, 북방정책 등)가 짝지어 제시되면, 우선 그 정책의 시대적 표지어를 떠올려 행정부를 역으로 검증한다. '인권외교'라는 단어가 보이면 곧바로 카터 행정부를 떠올리고, 문장 속 행정부명이 다르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아이젠하워=한미상호방위조약·전력증강 지원, 박정희=베트남 파병·주한미군 감축 저지, 닉슨=닉슨독트린·데탕트·주한미군 감축 갈등, 카터=인권외교·유신 갈등, 노태우=북방정책·한소·한중 수교로 각 행정부의 대표 키워드를 하나씩 고정해 암기한다.

NoteBase

문 19. 1970년대 일어났던 한국의 다자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② 한국이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했다.

③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④ 한국이 비동맹운동에 가입안을 제출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1970년대라는 시기 조건에 맞는 한국 다자 외교 사례를 고르는 문제이다. 각 선지에 등장하는 사건이 실제로는 언제 일어났는지 연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남북한 UN 동시 가입, APEC 가입, DAC 가입은 모두 1970년대가 아닌 훨씬 이후의 일이므로, 시기가 맞는 선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남북한 UN 동시 가입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1989년에 출범했고 한국은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한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한 뒤인 2009년에 가입했다. 반면 비동맹운동(NAM)은 냉전기 미·소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협의체로, 한국은 1975년 리마 비동맹외상회의를 앞두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북한 및 일부 비동맹국의 반대로 가입이 좌절되었다. 가입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가입안을 제출'한 사실은 197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 X. 남북한 UN 동시 가입은 1991년 9월에 이루어진 일로, 1970년대 사건이 아니다.
②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했다. → X. APEC은 1989년에 창설되었으므로 1970년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③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 X. 한국의 DAC 가입은 2009년으로, 1970년대와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④ 한국이 비동맹운동에 가입안을 제출했다. → O. 한국은 1975년 비동맹운동 가입을 시도하여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가입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가입안을 제출'한 사실 자체는 197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다자 외교 시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발생 시점이 1970년대가 아니라는 것이 함정이다. 사건의 존재 여부만 보지 말고 반드시 연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특히 ④는 '가입했다'가 아니라 '가입안을 제출했다'는 표현이므로, 가입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행위 자체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대가 제시된 문제는 사건의 존재 유무보다 '그 시기에 있었는가'를 우선 점검한다. 한국 다자 외교사에서 1970년대는 냉전 진영 논리 속에서 비동맹권에 접근을 시도하던 시기이고, UN 동시 가입·APEC·DAC 가입은 모두 1990년대 이후 탈냉전·경제성장기의 사건이라는 시대 구분을 기억해 둔다.

암기 포인트

1975년 한국의 비동맹운동 가입 신청(좌절), 1989년 APEC 창설 및 한국 참여, 1991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 2009년 한국의 DAC 가입 순으로 연대를 묶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20. 한반도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이 서명했다.

②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③ 동해와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영해선을 획정했다.

④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 서해 5도의 지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 범위 등 협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협정이 규정한 것은 지상의 군사분계선일 뿐 해상경계선(영해선)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핵심 개념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3자가 서명한 군사적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은 육상에 군사분계선(MDL)을 긋고 그 남북 각 2km씩을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했으나,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협정 부속 문서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기로 했다.

선지별 해설

①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이 서명했다. → 옳다.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3자 명의로 서명되었다.

②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국제연합군 통제하에 두기로 했다. → 옳다. 정전협정에서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기로 규정했다.

③ 동해와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영해선을 획정했다. → 틀린 표현이다. 정전협정이 설정한 군사분계선은 육상의 지상경계선이며, 협정 어디에도 동해·서해의 해상 영해선을 획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 올바른 표현: 정전협정은 지상에만 군사분계선을 설정했을 뿐 해상경계선(영해선)은 별도로 획정하지 않았다.

④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 옳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측이 각각 2km씩 후퇴하여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정전협정이 '군사분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영해선(해상경계선)'까지 획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협정문에는 육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동해·서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해 해상경계선(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배경을 알아 두면 이 선지가 왜 틀렸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전협정 관련 문제에서는 '군사분계선(지상)'과 '영해선·해상경계선'을 구분하는 선지가 반복 출제된다. 협정이 규정한 범위(서명 주체, 서해 5도의 지위,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규정하지 않은 범위(해상경계선)를 나누어 암기하면 옳지 않은 선지를 빠르게 골라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정전협정 3대 서명 주체: 국제연합군·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서해 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는 국제연합군 통제.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각 2km 후퇴, 비무장지대 폭 4km. 해상 영해선(경계선)은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NoteBase